

“당선 시 차지차가법 제정”

정동영 의원, 평화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서 자영업자 위한 의견 피력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민주평화당 대표가 되면 취임 첫날 현대판 소작인인 자영업자들의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 ‘한국판 차지차가법’ 제정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광주MBC 민주평화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종로 궁중축발집 사건을 예로 들어 “축발집을 7년째 했는데 건물주가 새로 오더니 월세 300만 원을 1,200만 원으로 올리면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민주평화

당 대표가 되면 농어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언급한 차지차가법은 일본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토지 및 건물의 이용관계 안정과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한 법으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기간이 만료해도 세입자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세입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 규정을 담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일본은 가계를 빌

리는 사람의 권리가 건물주의 권리와 대등하다는 차지차가법을 백 년 전에 만들었다”면서 “일본에 가면 백 년 넘은 우동집, 소바집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의원은 또 “현재 간이과세 기준 4,800만 원은 2000년에 만들어졌다”면서 “10여 년 사이 물가가 2배 오른 만큼 간이과세 기준도 2배 올려 장사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지지하는 전국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저 전북도당위원장에 출마합니다” 30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을 갖은 김준덕 후보가 기자들의 질문에 환하게 웃으며 답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핵폭탄”

김종식 도의원, 정부의 대사기극 ... 비난의 칼날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 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 현대중공업으로 인해 정부가 도민을 대상으로 대사기극을 펼쳤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전북도 또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쉬쉬했다는 것에 도민과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난 4월 해수부가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중 2018년 16척 이상 1조 6,499억, 2019년에는 21척 이상 3조 8,835억 규모의 공공선 발주를 추진하는 것에 군산 현대중공업은 계획에서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북과 군산에 약속한 ‘조선업 불황 타개’와 반대로 이와 같은 공공발주에 현대중공업은 입찰참가도 하지 못해 정부의 약속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

이는 지난해 말 대법원이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해 결국,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국가 공공발주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정당업자

가 되어서다.

30일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김종식(사진) 의원은 “국무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북을 찾아와 군산 지역경제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돼 더 이상 떨어질 곳 없이 파탄지역에 이른 군산경제에 말 그대로 핵폭탄이 투하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식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비리와 경영부실이 가장 큰 문제지만,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공공발주를 통해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고 한 약속은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 난감하다”면서 “또 그런 약속이 있음에도 전북과 군산에 대한 배려 없이 공공발주를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의 칼날을 높였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지정이나 희망 일자리 사업 같은 응급처방으로 전도민과 군산시민들을 기만하고 있



다”면서 “특히, 정부의 이런 태도를 전북도 역시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특히, 현대중공업이 공공발주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여전히 정부 공공물량 발주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대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종식 의원은 “송하진 지사는 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언제 인지하였고, 그에 대한 대책은 왜 수립하지 못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정부 활동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해명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작금의 군산과 전북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는 것밖에 없다”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도민과 한 약속을 이행하고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조선의원, 무더위 보다 뜨거운 학구열

의정활동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사기법 등 교육

전북도의회가 제11대 의회에 처음 입성한 조선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조기적응을 위한 역량강화 지방의정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어 무더위 보다 뜨거운 배움의 열정이 엿보인다.

도의회는 30일 오전 9시30분 의원 총회의실에서 6·13 지방선거에서 의정활동을 위한 특강을 열었다.

이날 특강은 ‘의정활동,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방의회연구소 주영진 교수를 초청해 지방자치법의 이해, 의정활동 방법,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의정활동의 기본지식과 맞춤형 사례 중

심으로 진행 후 질의응답을 하는 등 참석한 조선 의원들은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공 모드를 이어 갔다.

이는 조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현행과 업무를 최단 시일 내에 파악해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겠다는 각오로 보인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제11대 전북도의회에 입성한 39명 중 11명은 재선, 28명은 조선의원이다. 조선의원들의 역량 향상이 곧 전북의 발전으로 귀결됨에 따라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의정연구회 회장을 맡은 문승우 의원은 “조선의원들의 의정활동 조기

적응을 도모하고, 심도 있는 안전심사를 위해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 심도 있는 안전 심사와 입법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경찬 의정연구회 운영처장은 전북도의회 회기가 없는 8월 14일 및 21일~23일 의정활동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30일 제2차 의정 세미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탁교육은 △행정사무감사·조사 방법 및 착안사항 △조례입안 및 심사방법 △예산안 및 결산 심사기법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김진성 기자

노회찬 빈자리, 윤소하가 채운다... 직무대행 체제

윤소하(사진)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노회찬 원내대표의 별세로 공석이 된 ‘원내대표 직무대행’으로 뽑혔다.

정의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보다는 일단 직무대행 체제를 택한 것이다.

정의당은 30일 오전 10시30분

임시 의원총회 결과 당규 제6호 제3조에 근거해 윤소하 수석부대표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는 “당규상 원내대표 결위 시에는 1개월 이내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해야한다”며 “노 전 원내대표가 떠난지 얼마 안 된 상황



에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것보다는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다음 달 중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뉴스

최훈열 도의원, 김상만 가옥 민속문화재 지정해제 촉구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훈열(사진) 의원(부안)은 제355회 임시회에서 인촌 김성수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2017.4.13)에 따라 ‘부안 김상만 가옥 국가민속문화재 해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최훈열 의원은 2017년 4월 13일 대법원(1)1 대법원 2016두346,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1누40709판결, 이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와 제17호에 따라 인촌 김성수를 친일반

민족행위자로 판결하여 ‘건국훈장 대통령장’ 취소와 ‘현충시설 5곳 해제’가 이미 이뤄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김상만 고택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결의안 발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초 지정사유는 “인촌 김성수(1891-1955)가 어린시절을 보낸 집으로 주목받고 있는 초가집이라는 점, 부통령을 지낸 당대의 뛰어난 인물인 어린시절을 보낸 집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평가됨”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사실상 인촌 김성수로 인한 것임을 부



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훈열 의원은 결의안에서 “34년이 지난 2018년 4월에서야 심의를 하였으나 이마저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정이나 30여년 이상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받은 것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부결시켰다”고 주장하고 문화재청의 직무유기와 권한 남용 등 위법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화재 지정해제를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